

사회대통합 첫 일자리 모델 구현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인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적정임금·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원화정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을 핵심과제로 한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 62만 8,000㎡ 부지에 연간 1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7,000억원 규모다. 이중 2,800억원을 참여자 투자로, 나머지 4,200억원은 금융권 차입으로 마련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참여자 투자 몫인 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590억원(21%)을 우회 투자해 최대주주로 나서고, 현대자동차가 530억원(19%)을 투자해 2대 투자자로 참여한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위탁 생산하게 된다.

◇생활기반·복지 제공

광주형 일자리의 프레임은 절반 임금에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개 연평균 임금(9,213만

원)의 절반보다 더 낮은 3,500만원 수준이다.

구상대로라면 대기업 평균 연봉 수준의 적정 고용 일자리 1,000여개가 만들어지고,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2,000여개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빈곤 연봉과 복지를 결합한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노사민정 타협 통한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 6기 윤창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시작했다. 2014년 9월 전담 조직으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이 신설됐다. 이후 2015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민선 6기 말인 지난 6월 1일에는 현대차가 광주시에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자본투자 의향서를 제출, 구상 단계를 넘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6월 19일 예정했던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광주시와 현대차 간 이견차이로 연기됐다.

절반임금에 복지 결합한 대안 주목 근로시간·노동 등 '4대 원칙' 핵심 지속 가능한 사업 등 문제점 해결도

이윤섭 시장이 민선 7기 새 단체장으로 입성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또 지난 9월 중순 노동계가 적정 임금에 대한 불만과 협상 배제 등을 내세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실패는 평가를 받았다.

어렵게 마련한 일자리 사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사회에 확산했고, 각계각층이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불씨는 되살아났다. 10월 26일 광주시·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원탁회의가 열렸고, 10월 30일에는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 협약을 현대차에 제시했다. 수정협약안에는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 삭제와 연간 생산 물량 보장 등 기본협약을 일부 조정된 내용이 담겼다.

수정 협상안을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의 이견차가 커지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제3지역을 거론하며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27일 한국노동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 협상단에

포괄적 의미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등 해결

광주형 일자리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협약서에 사인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경영 책임, 수익구조 창출, 투자 유지 등 해결해야 한다.

당장 현대차노조는 이르면 6월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입장이다. 현대차노조는 실적악화로 인한 추가 투자 부담과 기존 일자리 악영향 등이 이유로 파업 불사까지 거론하며 광주형 일자리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현대차와의 협상이 성사되고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합작법인에서 생산할 차량 종류와 생산 물량 확보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 차량 판매와 경영 주체, 자본금 충당, 빛그린산단 인프라 구축 등도 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황애란 기자

정치 브리핑

“KOICA 대북개발 참여 법적 근거 마련”

천정배 의원,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을)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북한 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제1조 중 "개발도상국가와 의"를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과의"로, "개발도상국가의"를 "개발도상국가 및 북한의"로 개정하여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원조대상을 개발도상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필요한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법조항 등으로 인한 논란으로 KOICA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천 의원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KOICA는 그 자체로 풍부한 개발협력 노하우를 갖추어 남북 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다른 국제개발협력기구 사이에서 상호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청소년 근로자 휴식시간 늘려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시)은 4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연소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일 동안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A군은 하루 7시간을 일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받고 있지만, 같이 일하는 대학생은 8시간을 일



하고 1시간을 쉰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많은 연소 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부의장은 "성인 근로자보다 업무 처리에 더 힘든 연소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 시간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농성

4일 오후 국회 로텐드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연좌농성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철 2호선 차량에 '광주다움' 입힌다

차량 디자인에 시민의견 반영 내년 11월 제작

공문화 과정을 통해 재추진이 결정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이 제작된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 1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 차량 디자인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차량설계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제작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2호선 차량 디자인에 반영할 이미지, 색상, 형상 등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온라인과 현장 설문 병행 조사를 벌여 차량 내외부 디자인 시안 5개를 마련했다.

이들 시안은 각각 무등산의 정기를 바탕으로 한 광주의 기상, 미래지향의 전진감을 갖는 광주의 비전, 화합과 자유의 의미를 기리는 광주의 기억, 평화

의 상징을 통한 광주의 마음, 문화예술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광주의 가치 등 '광주다움'을 입히는 디자인을 컨셉으로 했다.

오는 13일까지 디자인 분야와 철도차량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시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이들 시안에 대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벌여 내년 1월에 2호선 차량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시민선호도 조사는 지난 2월 실시했던 시민 의견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디자인 기획부터 결정까지 시민이 선호하고 공감하는 '광주다움'을 담은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도의회, 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 심의 거부

교육지원센터 구축 물거품

전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필요한 조례안 심의를 거부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위는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 긴급 의안 제출을 협의하는데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기 중 의안 제출에 필수적인 상임위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22개 시·군 교육지원센터 학교 교육지원센터 구축 등이 담긴 조직개편안은 이번 회기 중 통과되는 물론 내년 3월 시행도 어렵게 됐다.

교육위는 "도교육청 내부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

에 문제가 많았고 긴급 의안으로 시간을 다투어 시급하게 처리해서 안 될 중차대한 조직개편"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만 준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 조례 등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시사한다"며 "이를 의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 흠결과 내부 갈등을 용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중학생 무상교육, 고교 교과서 무상제공,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등 추진 과정을 놓고도 "너무 서둘러 미숙해 실망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근산 기자

“김장철 ‘해남배추’ 둔갑 특별 단속해야”

김성일 도의원, “포대같이 농민 피해 우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타 지역산 배추가 '해남산 배추'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해남)은 4일 "타지역 배추가 해남산으로 거래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별 단속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간 전북지원과 함께 전북 고창, 무안 등에서 배추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전남해남'으로 표시된 배추에 담는 소위 '포대같이'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업자 2명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



자 선호도가 높은 해남배추가 타 지역산 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다른 지역 배추가 해남산 배추로 둔갑해 유통되면 그 피해가 해남의 배추 생산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며 "농관원이 앞으로 단속 강화와 함께 홍보를 병행하기로 한 만큼 배추 원산지 허위 표시가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겨울배추는 해남고구마와 함께 농관원에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정근산 기자

‘복구청 검토부’ 행정사무조사 추진

광주 북구의회가 구청 검토부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북구의회는 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백순선 의원이 발의한 '복구청 직장 운동경기부(검토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순선, 선승연, 최용환, 전미용, 김형수, 양옥근, 김건안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3차 본회의

에서 조사계획서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한다.

백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부의 방안 운영, 감독·코치 임용절차 문제, 훈련일정 미준수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감사 도중 검토부 감독과 영상통화를 시도해 구청 소속 검토부의 허위 전지훈련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복구청은 지난달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감독을 해임했다.

/이나라 기자